



보 도 자 료 Press Release

2013 년 9 월 12 일

배포 후 바로 보도 가능합니다.

총 3 장

담당: 홍보실 김성연 연구원

전화: 02-3701-7349

이메일: sungyeon@asaninst.org

communications@asaninst.org

아산정책연구원, 통진당 이석기 의원 내란모의 논란 및

국정원 개혁 관련 여론조사 실시

이석기 의원 국회 제명 주장에 동의 69.7%, 동의 않음 17.8%

- 『아산정책연구원』(원장 함재봉, www.asaninst.org) 여론연구센터는 최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논란과 국정원 개혁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. 68.1%의 응답자가 내란모의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고, 내란모의 논란에 대해 알고 있는 응답자의 74.3%는 이석기 의원이 내란을 모의했다는 주장에 동의했다. 이석기 의원을 국회에서 제명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비율 역시 69.7%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.
- 종북세력으로 비난 받는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통진당 정치인들에 대해서 반국가세력이라고 보는 비율은 38.6%였다. 다수인 41.8%는 모른다고 답해 응답을 유보했다.
- 한편, 내란모의 수사가 국정원 개혁논의를 회피하기 위한 주장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은 45.5%,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35.6%였다. 82.8%에 달하는 대다수의 응답자가 내란모의 수사가 진행되는 현 시점에도 국정원 개혁이 여전히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.
- 김지윤 여론연구센터장은 “이석기 의원이 내란을 모의했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국민이 다수였고, 국정원 개혁 필요성을 지지하는 응답자의 비율 역시 높았다.”며 “국민들은 두 이슈를 별개의 독립적인 사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내란모의 사건과 국정원 개혁을 별개로 취급하며 두 사건 모두에서 소기의 성과를 이뤄내야 할 것으로 본다.”고 했다.
- 이번 조사는 전국 성인남녀 1,000 명을 대상으로 했고, 95% 신뢰 수준에서 표집오차는 $\pm 3.1\%$ 였다.

아산정책연구원 (원장 함재봉, www.asaninst.org)은 객관적이면서 수준 높은 공공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연구기관입니다. 한반도, 동아시아, 그리고 지구촌의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, 국민과 정책결정자들이 합리적이고 공공의 복리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선택하도록 돕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지향합니다. 2008 년 설립 이후 국내외 학술교류, 아산플래넘, 아산핵포럼과 같은 대규모 국제회의 개최, 《China's Foreign Policy》, 《Japan in Crisis》, 《출구가 없다》, 《14 호 수용소 탈출》, 《선거연구 시리즈 1,2,3》 연구 서적 출간 등의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으며, 2012 년 펜실베이니아대 주관의 세계싱크탱크 랭킹 지역부문에서는 5 위를 차지하였습니다.

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 결과

조사개요

『아산정책연구원 (원장 함재봉)』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국민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9월 8일부터 10일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. 이 조사는 휴대전화와 유선전화를 사용한 임의번호 걸기(Random Digit Dialing, RDD)방식으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,000명에게 실시했습니다. 표집오차는 95% 신뢰구간에서 $\pm 3.1\%$ 입니다.

주요결과

- ✓ **이석기 의원 내란모의 논란 인지도: 알고 있다 68.1%, 모른다 30.1%**
- ✓ **이석기 의원이 내란을 모의했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함 74.3%, 동의하지 않음 19.8%**
이번 내란모의 논란을 알고 있다고 답한 681명에게 이석기 의원의 내란모의 주장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묻자 74%의 응답자가 동의한다고 답했다. 내란모의 주장 동의여부는 이념성향별로 상이했다. 진보층은 60.2%가 동의(동의 않음 33.1%), 중도층은 72.7%가 동의(동의 않음 22.1%), 보수층은 82.0%가 동의(동의 않음 14.0%)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✓ **이석기 의원 국회 제명: 동의함 69.7%, 동의하지 않음 17.8%**
이석기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 여부를 물어본 결과 69.7%의 국민이 이 주장에 대해 동의했다. 새누리당 지지층은 85.6%가 이 의원의 국회 제명을 동의했다(동의 않음 6.8%).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상당히 많은 64.8%가 이 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동의했다(동의 않음 25.8%). 무당파의 55.1%가 동의, 24.2%가 동의하지 않았다.
- ✓ **통합진보당을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함 56.2%, 동의하지 않음 31.1%**
통진당 해체 주장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은 56.2%로 앞선 이석기 의원에 대한 여타의 주장에 비해 동의하는 비율이 낮은 편이었다. 과반이 넘는 국민은 이 의원의 내란모의 논란을 통진당의 책임으로 연결하여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 수가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하지는 않았다. 마찬가지로 보수적 이념성향을 가질수록, 새누리당 지지층일수록 통진당 해체 주장을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다.
(이념성향별 통진당 해체 주장 동의 비율: 보수 73.2%, 중도 51.7%, 진보 39.9%)
(지지정당별 통진당 해체 주장 동의 비율: 새누리당 지지층 76.8%, 민주당 지지층 40.4%)
- ✓ **야권연대책임론: 동의함 49.4%, 동의하지 않음 36.8%**
이번 논란이 야권 전체의 책임이라는 야권연대책임론에 동의하는 비율은 과반에 약간 못 미치는 49.4%로 나타났다. 동의하지 않는 비율 역시 상당히 높은 36.8%였다. 연령대별 야권연대책임론에 동의하는 비율은 20대 43.0%(동의 않음 44.2%), 30대 43.6%(동의 않음 47.0%), 40대 37.8%(동의 않음 51.1%), 50대 61.8%(동의 않음 25.8%), 60세 이상 62.5%(동의 않음 14.0%)였다. 40대 이하가 상대적으로 야권연대책임론에 대한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면, 50대 이상은 야권연대의 공동 책임으로 보는 비율이 60% 이상으로 높았다.
- ✓ **통진당 종북세력 정치인에 대한 의견: 안보 위협하는 반국가세력 38.6%, 반국가세력 아님 18.5%**
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김재연, 김미희 의원 등 종북세력으로 비난 받는 정치인과 통진당에 대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으로 보는 국민은 38.6%였다. 최근 언론에서 있었던 대대적인 종북 때리기 에 비하면 낮은 수치라고도 볼 수 있다. 오히려 이 질문에 대해 모르겠다고 응답을 유보한 비율이 41.8%로 가장 많았다. 많은 응답자가 종북세력으로 지목 받은 인물과 조직에 대해 북한을 추종하는

세력이라기보다는 21세기에도 내란모의 논란을 불러 일으키는 “이념논리에 빠진 인물”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.

- ✓ **내란모의 수사가 국정원 개혁논의 회피용이라는 주장에 대해 동의함 45.5%, 동의하지 않음 35.6%**
일각에서 제기되는 내란모의 수사가 국정원 개혁논의 회피 목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은 45.5%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35.6%보다 높았다. 국정원 개혁논의 회피용이라는 주장에 대한 동의 비율은 응답자의 지지정당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. 이러한 주장에 대해 새누리당 지지층의 30.7%(동의 않음 51.7%)만이 동의한 반면, 민주당 지지층은 67.1%(동의 않음 21.0%)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지지정당이 없다고 한 무당파층은 동의 51.3%, 동의 않음 25.4%였다.
- ✓ **국정원 개혁에 대한 의견: 중요하다 82.8%, 중요하지 않다 9.0%**
내란모의 논란이 일고 있는 현 시점에도 국민의 대부분인 82.8%가 여전히 국정원 개혁이 중요하다고 답했다. 이념성향과 지지정당에 상관 없이 다수의 국민이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.
- ✓ **국정원 국내 정보 부문 개혁에 대한 의견: 현행 유지 29.9%, 최소기능 유지 35.0%, 전면 폐지 8.3%**
이번 내란모의 논란과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 업무에 대한 개혁 방법에 대해 물어본 결과, 35.0%의 국민은 국정원의 정치개입 논란을 줄이기 위해 국내 정보 업무에 대해 최소한의 기능만 남겨두고 대폭 조정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.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비율은 29.9%였다.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비율은 8.3%로 나타났다.
- ◆ 조사관련 문의: 강충구 연구원(02) 3701-7343, ckkang@asaninst.org
이의철 연구원(02) 3701-7337, eclee@asaninst.org